

# 이주열 “대내외 불확실성 커져가”

### 경제동향간담회 주제 “부동산시장·외국인자금 유출입·가계부채 유의해야” “영국 브렉시트·미국 금리인상·김영란법·기업 구조조정 등이 불확실성 요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방향은 물론 속도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25%로 인하한 뒤 가계부채 증가 등의 여파를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동향 그리고 외국인자금 유출입 동향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에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뿐”이라고 진단한 블룸버그 기사를 인용했다. 블룸버그 기사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제여건의 장단기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해당 기사를 거론하면서 “우리경제도 상황은 비슷하게 하반기 경제여건과 관련한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대외적인 불확실성 요인으로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꼽았다. 대내 요인으로는 기업 구조 조정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언급했다.

그는 “23일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일본에서도 관심 폭발 3D프린터 개발업체 (주)굿쓰리디가 대한민국 최초로 개발한 UV DLP 3D프린터 'G Printer'가 22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 최대의 'DMS(design engineering & manufacturing) EXPO'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소개되고 있다.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작아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금년 중 1, 2회의 추가 인상 전망 가능성이 여전히 커서 우리의 통화정책 운용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국내적으로는 5월 중경남 지역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점차 가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 지역의 실업자 수는 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4만3000명) 대비 2만2000명(51%) 늘었다. 경남 지역의 실업률은 3.7%로 지난해 5월(2.5%)보다 1.2%포인트 상승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크게 올랐다.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하직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소위 김영란법의 시행도 분명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600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달 금융위의 금리 인하에 이어 정부도 재정 정책을 적극 펴갈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내외 충격의 영향이 어느 정도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경제·금융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 “일자리 나누기 등 사회적 타협 필요”

### 경제전문가들 강조 “고용여건 악화는 구조적 요인”

경제 전문가들은 22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복지 등 고용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 참석해 “채감산업틀이 상승하는 등 최근 고용여건이 악화한 요인으로 는 노동수급 미스매치(불균형)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들은 “최근 유가가 안정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기초적

인 개선 흐름이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특히 “철강 등 중국의 공급과잉이 저가수출로 이어지면서 상당 기간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들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공급과잉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의 방지,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의 정립, 국민 공감대 형성 등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틀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진수 기자

## 주요 은행 5월 주택담보 대출금리 2%대로 낮춰

조선·해운 업종에 대한 위험노출액(익스포저) 규모가 큰 NH농협은행을 제외한 주요 은행들이 모두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를 연 2%대로 낮췄다.

22일 은행연합회에 공시에 따르면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들은 모두 5월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의 평균금리를 2%대로 설정했다.

주요 은행 중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전달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2.87%로 가장 낮았다. 국민은행이 전달 대비 0.04%포인트 낮춘 2.91%로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은 2.92%로 전달보다 0.07%포인트를 내려 낙폭이 가장 컸다. 전달 3.01%로 3% 선을 유지했던 신한은행은 5월 들어 0.05%포인트를 인하 2%대(2.96%)로 돌아섰다.

IBK기업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74%로 책정했다.

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를 전달 대비 0.05%포인트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3.00%의 높은 금리를 고수했다.

외국계 은행의 경우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2.74%, 한국씨티은행은 2.88%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했다. /인진수 기자

## 전과 규제·기자재 평가 절차 개선

### 미래부, 드론·IoT 등 스마트 융합기기 조기 상용화 지원 위해

5세대 이동통신, 드론(무인 비행체), IoT(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융합기기 조기 상용화를 돕기 위해 전과 규제가 개선된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절차도 개선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 23일부터 이같은 전과법 시행령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전과법 시행령은 드론, 무인자동차 등 무인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해 무선국 허가제도를 보완했다.

드론 무인자동차용 무선국기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무선국 종류(무선조정기동국·무선조정중계국)를 신설했다. 규제프리존·국제행사 개최 지역 등에서 전파 시험실비(실용국·실용화 시험국) 준공감사를 면제, 새로운 융합기기의 허가기간을 현재 3~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

개정 시행령은 5G 글로벌 표준선도에 필요한 스마트 융합기기 등 새로운 전파기술개발과 성능시험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무선국 허가·검사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무선국 신고 면제 대상의 거리제한을 폐지해 IoT 전용 전파망 구축 토대를 마련했다. /인진수 기자

## 부실 징후 대기업 계열사 56곳 이번달 취약기업 선정

부실 징후를 보이는 대기업을 미리 가려내기 위해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취약기업이 5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약기업에 대한 최종 선정은 이번달 마무리될 예정인데, 지난해보다는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업무실명 자료를 보면,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9개 그룹 소속 기업체 중 56곳을 대상으로 채권은행이

재무 및 비재무평가를 실시했다.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해당 그룹은 차입금 축소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금감원은 매년 금융권 신용공여액의 0.07% 이상인 계열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는데 올해는 금융회사 총

신용공여액이 1조3581억원 이상인 39개 대기업 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이 기업군에 속한 계열사 수는 4483개다.

앞서 은행들은 2014년 42개 주채무계열을 평가해 이 중 14개 대기업 계열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했고 지난해에는 41개 계열 중에서 11개 대기업 계열과 약정을 맺었다.

올해는 조선·해운·건설·철강·화학 등 5대 취약 업종을 비롯해 많은 업종에서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약정대상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복섭 신용감독국장은 “이달 안으로 주채무계열 평가는 마무리될 것”이라면서도 “선정 기업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채무계열 평가와 별도로 금감원과 은행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 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대상은 7월 말에 중소기업은 11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A·B·C·D 4 단계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C등급은 워크아웃, D등급은 법정관리를 받게 된다. /인진수 기자



###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금융지원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